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제336호 | 2020년 9월 17일 ~ 9월 23일 | 값 1,000원

ISSN 2005-8217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업자 명칭 :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창간호) :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기업·군비에 수백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관련 기사 3면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3면

추미애 '엄마 찬스'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2면

옛 소련 블록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5~8면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10~11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12면

국제
미국 산불과 기후 위기 4면
미국 대선 9면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 재개 12면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11면

여권의 추미애 감싸기

문재인 레임덕 막을 검찰 장악 위한 무리수

김문성

사진 출처 법무부

추미애의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휴가 미복귀 무마)에 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설 쓰네"라고 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번 의혹 제기는 다큐에 가까운 듯하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의 보좌관이 적어도 두 차례 서 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청탁하는 전화를 건 일, 서 씨 휴가 미복귀가 문제 된 2017년 6월 25일 심야에 부대를 방문해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 처리로 하라'고 지시한 상급부대 장교가 누구였는지 등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미애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딱 1년 전인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때부터 만악의 근원이 검찰인 듯이 굴던 자들이 이제는 검찰이 알아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대표인 이낙연부터 심지어 (비문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서 그러고 있다.

민주당은 9월 16일 친문계가 아닌 두 현역 의원을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 일가로서 매우 무책임한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전주 지역구의 이상직과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 들통난 김홍걸(김대중의 아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추미애 의혹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추미애 변호론자들은 서 씨의 수술과 다친 아들에 대한 모정에 호소한다.

그러나 휴가 의혹의 본질은 서 씨가 병가가 종료돼 부대 복귀 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상황에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에 휴가 연장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여당 대표의 자식에게 부여된 특혜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다. 일반 사병이라면 탈영으로 취급되고 (사정이 있든 없든) 징계를 받을 일이다.

그런데 서 씨는 부대에서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연락이 올 때까지 집에 있다가 그제서야 휴가를 연장 처리한 것이다. 심지어 휴가 연장을 정당화할 서류도 없다고 한다.(이전 병가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따라서 추미애 아들 **미복귀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은 이 사회의 불평등과 특권층의 행태를 다시 드러낸 일이다. 게다가 특권 행사 당사자이면서 지금도 그 점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바로 법 집행을 총괄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다.

바로 그 법무부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장악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조금씩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토착왜구'의 근거 없는 음해라더니 결국 사기와 횡령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민주당은 감싸 왔다.

세 사람은 모두 언론은 기피하면서 개인 SNS(페이스북)에 자기 정당화하는 글들을 자주 올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추미애가 쓴 글의 결론은 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권 수뇌부에 검찰 장악을 계속 하려면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신호로 읽힌다.

추미애가 한 일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된 뒤로 이룬 업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층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일뿐이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조국 일가의 부정 혐의,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금융 비리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되거나 검찰에서 나갔다. 반대로 이번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를 8개월이나 질질 끄는 식으로 정권에 잘 보이려 한 검사들은 요직으로 승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빌미로 막강한 억압(치안)기구인 경찰의 수사 권력이 더 강해진 것도 매우 불길한 일이다.

집권 4년차로 접어들면서 경제 실패와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로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집권 말기 권력 누수(레임덕)를 막으려고 검찰 장악에 필사적이다. 그리고 이런 수사 방해를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일에 앞장서 온 추미애를 여권 지도부가 감싸는 이유다.

그러나 의혹을 더 틀어막기도 어렵고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수록 추미애를 계속 감싸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추미애를 버리는 것도, 계속 감싸고 가는 것도 모두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이 지난해 조국 파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다. 지난해에는 조국을 경질하고서 지지율을 부분 회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 윤미향 등 연이은 부패 논란을 거치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 위선에 학을 뗀 사람들이 이미 많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의 대표 조직들은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정치적 냉소가 커지면, 특히 청년층에선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기대, 대중적 저항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회의가 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등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커진다. 우파가 더 나쁘니 정치적 냉소를 버리고 민주당을 옹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다. 냉소의 이유가 민주당 정부의 부패 · 위선과 개혁 염원 배신에 있으니 말이다.

경제 · 코로나 위기를 평범한 서민층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사람들이 환멸과 배신감을 느끼는 근원이다. 자본주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지배계급이 전가하는 고통에 맞서 투쟁적 · 급진적 노동계급 운동이 건설돼야 할 이유다.

도심 한복판에서 생물무기 실험하는 주한미군

김영익

사진 출처 민주노총 부산본부

2019년 4월 부산항 8부두 미군 출근 저지 집회

여러 해 전부터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이 계속 폭로돼 왔다. 미군이 한국에서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해 왔고, 이를 위해 탄저균 같은 위험한 독소가 한국에 반입돼 온 것이다.

2015년에는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연구소가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탄저균은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이 일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주피터(JUPITR)라는 생물무기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이 폭로됐다.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시험용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생화학방어프로그램인 센토(CENTAUR)를 위해 부산 8부두 시료분석실, 군산 기지, 오산 기지, 평택 기지 등지로 보툴리눔 ·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이 반입됐음이 지난해에 폭로됐다. 모두 생물무기 개발 실험이 가능한 물질들이었다. 센토는 주피터가 확대 ·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군은 해당 시료들이 위험성이 없는, 즉 "사멸된 것(사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적국의 생물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을 사균으로만 진행한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

지금 미군은 한국에서의 생물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더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평가서에는 올해 센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세균전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조기경보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실험을 통해 얻은 세균전 기술을 주한미군 전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8월 26일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는 센토를 위탁 운영하는 한 미국 회사가 부산, 대구, 진해 등 주한미군 주둔지 7곳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음을 폭로했다. 즉, "미국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하는 위험한 실험을 우리 나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에서 진행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방어?

미군은 이런 프로그램들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의 존재에 대해 방어적 성격이라고 해명해 왔다. 즉, "점증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과 국제적인 생화학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방어 목적으로 실험되는 세균이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 소련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다룬 바 있는 세르게이 포포프는 "방어용과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단계는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 하에서 '북한의 가상 도시를 상정한 시가전 모의 실전 훈련'을 실행했다. 이게 방어적 목적의 화생방 훈련이었을까?

한국의 도시 곳곳에서 생물무기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한

▶ 3면으로 이어짐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정선영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현재 대규모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올해 8월에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무려 17만 명이 줄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9월에는 그 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요구해 온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선별 기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고생이라고 돈이 덜 드는 것도 아닌데, 미취학 아동들이 포함되고 중고생들은 혜택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개인 택시는 받고, 사납금 때문에 쩔쩔매는 법인 택시 기사들은 못 받습니다."

"지급 기준이 너무 불평등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 다수는 지원에서 배제됐다.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하늘 높이 치솟은 야채 값, 과일 값에 추석인데 아이에게 전 하나, 꼬까옷 하나 사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외라니요. 어떻게 이렇게 각박할 수가 있나요?"(기초생활수급자인 39세 미혼모)

노동자들도 대부분 배제됐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개월 연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추산으로도 관련 지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5퍼센트에 불과하다. 95퍼센트가 제외된 것이다. 정리해고를 당한 605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러니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질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선별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 · 여당은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런 정책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불만만 사고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들이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며 선별 지급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대중의 삶을 천대하는 시장주의 우파의 본질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산을 대폭 늘려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해야 한다.

우선순위

이제까지 우파 언론들은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적다는 공격을 해 왔다. 대부분 기업 지원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에는 114조 원이 넘는 돈을 쓸 계획이지만 재난지원 예산은 매우 아끼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들도 같은 전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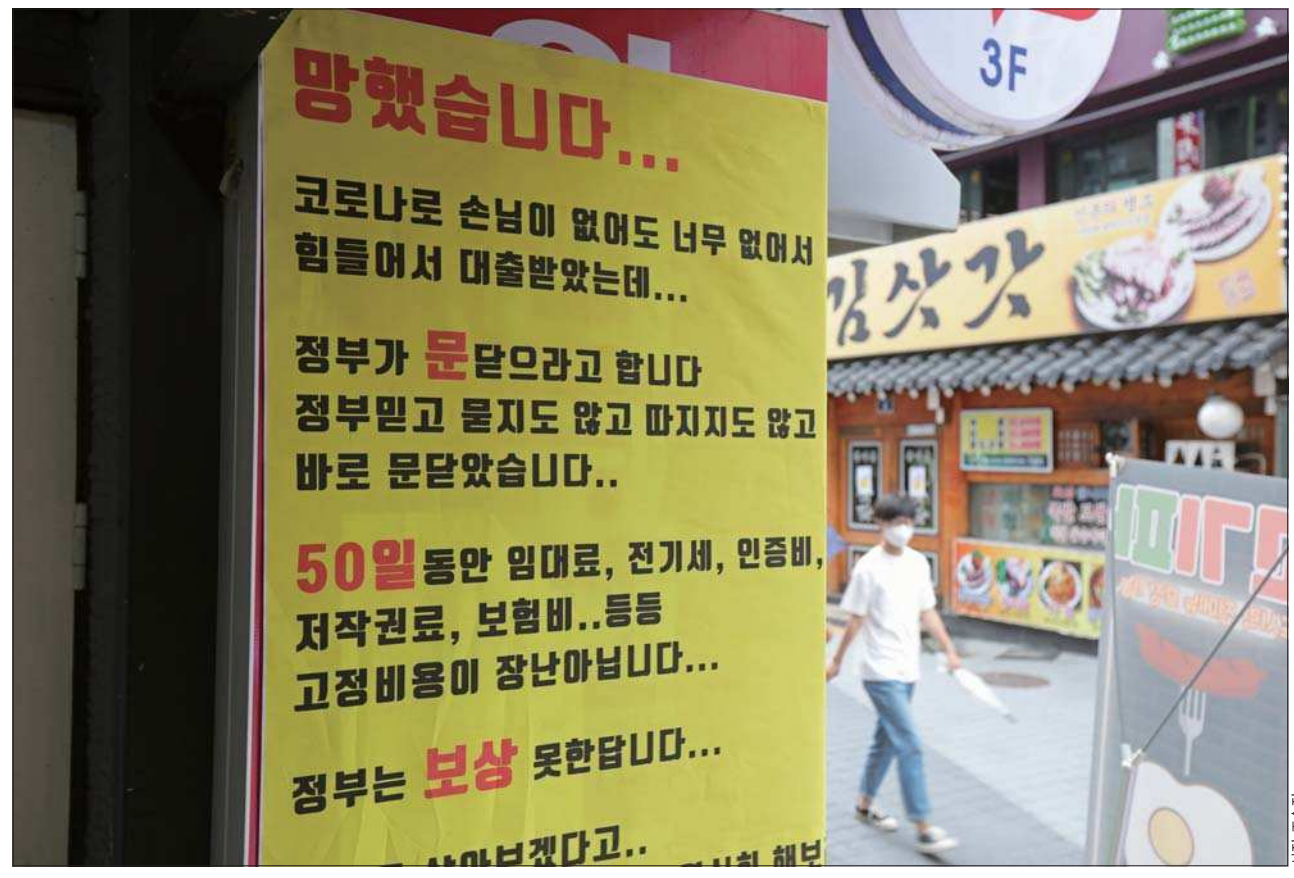


사진 조승진

원망, 배신감의 목소리 월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폐업한 가게

그러나 당장 내야 할 월세와 끼니 걱정에 전전긍긍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 속에 불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 지원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 서민의 삶을 위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에 반대하며 제한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노동자 · 서민의 피해가 광범하다는 현실과 정부가 지원 대상을 관료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봐도 전체 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해고 위협을 겪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소득 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은 시간과 돈이 들 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국에, 거기다가 가난까지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기업주들에게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융과 재정 지원을 했다. 향후 5년 동안 300조 원에 달하는 군비를 투입할 계획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계획만 철회해도 7조 원을 아낄 수 있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이다.

기업주 · 부자가 아니라 노동자 · 서민을 지원하고, 기업주 ·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위기의 비용을 치르게 하라는 요구는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이 심할수록 계급 투쟁을 중시하는 정치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협력도 문제의 일부

▶ 2면에서 이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다가 안전 사고가 난 전례가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부가 우한 도심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살아 있는 탄저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소라는 보툴리눔 따위를 한국 대도시에 가져다가 위험한 짓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피터 · 센토 등은 미국의 패권 전략과 관련돼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내놓으며 이렇게 밝혔다.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미국 정부가 밝힌 바로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재균형(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표방한 후다.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 덕분"에 한국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5년에 미군이 탄저균을 보낸 아시아 나라 중에는 한국 말고도 호주가 있었다. 모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필요한 아시아 동맹국들이다.

즉,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와 해당 프로그램들은 미국과 중국 등의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경쟁국들에 견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거기서 북한 생화학무기의 '위협'은 미국에 의해 과장된 채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돼 왔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는 즉각 철수해야 하고, 관련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은 모두 폐기 · 철거돼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마음껏 세균전 실험을 하게 해 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생물무기 관련 실험을 진행하면서, 생화학무기 유출입을 규제하는 관련 국내법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태를 적당히 무마하기에 바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은 "미국과 특수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군의 위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두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시료 반입 폭로가 나오자,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주한미군을 두둔했다.

단지 미국의 '호구'여서 한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미국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2011년부터 '한 · 미 생물방어연습'을 공동으로 실시해 왔다. 미국은 한 · 미 생물방어연습의 경험과 교훈을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그리고 2013년 한국과 미국은 세계 최초로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었다.

2013년 미국의 제23화학대대가 한국에 배치됐다. 제23화학대대는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 핵무기 · 생화학무기와 관련 생산시설을 접수하는 임무를 맡는다. 지난 2월에 이 부대는 한국군과 합동으로 벌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소식을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생물학적 위협요소에 대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협약"을 한국 정부와 추진하려 한다. 즉, 조만간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더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반도가 위험한 생화학전 실험장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에 대한 정부의 모든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

기사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산불

기후 위기와 이윤 체제가 낳은 재앙

인도적 · 생태적 재앙이 미국 서부 전역을 맹렬하게 휩쓸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와중에 강풍으로 거세진 산불로 가옥 수천 채가 불타고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미국 전국부처합동소방센터(NIF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화재로 총 약 1만 8200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의 약 19퍼센트]가 불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 오리건 · 워싱턴 주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9개 주로도 화재가 맹렬하게 번지고 있다.

오리건주에 살던 비어트리스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신히 산불을 피했다. 자동차 양 옆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차를 몰아야 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졌죠."

대피

사람들은 대피소 바깥에 캠핑카나 승용차를 대거나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불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화마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도 있다.

피난민인 샘은 이렇게 말했다. "다들 텐트를 사려는 통에 텐트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샘은 처음에 갔던 대피소가 불길에 휩싸이게 생겨서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오리건 북서부의 작은 마을인 디키 프레리에서 탈출한 샤이엔은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돌아갈 집이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2020년〉이라는 제목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미국의 어느 기후학자의 말

이는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야기한 재난이다. 가뭄이 길어지고, 날씨가 갈수록 건조하고 뜨거워져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빌어먹을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실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들로 불길이 번질 위험 때문에 4만 명이 대피했다.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공기는 재와 연기로 그득하다. 그 도시들은 주황색 스모그로 뒤덮였다.

현재 포틀랜드 ·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의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나쁘며, 로스앤젤레스는 일곱 번째로 나쁘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다른 불길이 합쳐지자 불길을 따라잡느라 분투하고 있다.

산불 진압의 최전선에 투입된 소방관 중에는 수감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그 일을 하고도 쥐꼬리만한 보수밖에 받지 못한다.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즐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싱턴주의 기후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탓입니다."

이 화재는 지난 1월 호주를 불태운 산불처럼 이전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난 산불들은 피해 면적이 약 1만 2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서로 합쳐져서 진압이 어려운 거대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주 오리건주에서는 단 7일만에 연평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

산불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있다. 세계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0개 연도 중 9개 연도는 2005년 이후였고, 이는 사람들과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쳤다. 이미 기후 위기가 진행 중인 것이다.

기후 혼돈이 모든 대륙을 휩쓸 것이라는 점은 이제 이론적 쟁점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거대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이다.

기후 위기를 일으킨 것은 바로 화석연료 경제를 발전시킨 자본주의다.

큰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극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 체제다.

이 기후 비상 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사태를 낳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사라 베이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2호 / 번역 오선희

벨라루스 항쟁

푸틴 만나는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기다

9월 14일(현지시각) 벨라루스 시위대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회담을 앞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굴욕을 안겨 줬다.

수도 민스크에서 최소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으로 촉발된 대규모 행진이 6주째 이어진 것이다.

복면을 쓰고 표식 없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대오에서 끌어내 승합차에 태우는 영상이 찍혔다.

탄압에도 운동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루카셴코는 러시아의 도움을 얻으려 한다.

푸틴의 도움을 받는 대가는 두 나라의 더 긴밀한 "국가 연합"일 것일 것이다. 루카셴코는 푸틴의 이러한 제안을 올해 1월에 거부한 바 있다.

러시아는 또한 벨라루스의 국영기업을 탐내고 있다.

한편, 항쟁 내 자유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서방의 지원을 바란다.

그러나 그전까지 서방 국가들은 루카셴코 정권과 경제적 · 군사적으로 더 긴밀하게 기꺼이 협력하려 했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이야말로 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루카셴코를 몰아내며, 진정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토마시 텡글리-에반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2호 / 번역 이원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국제법은 자본주의를 위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 ] 안의 내용과 박스 안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에서 넣은 것이다.

[영국] 정부의 내부시장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든 루이스가 그 법이 국제법에 위반될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당의 전 지도자들과 여러 고위층이 브랜든 루이스와 보리스 존슨에게 격노했다.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조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라틴어 경구를 트위터에 남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안을 놓고 영국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 국제법 [존중] 사상은 1989~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주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킴 대럭은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한 사실이 폭로된 뒤 주미 영국 대사 자리에서 밀려난 인물이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가 외교의 세계에 들어올 당시, 영국 제국이 사라진 이후의 영국 외교는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과 미국과의 오랜 '특별 관계'라는 두 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구들은 국제 질서에서 존경받는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국민투표나 트럼프 당선 훨씬 이전에도,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기꺼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이다. 이 침략 전쟁의 명분은 날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의 주요 설계자였던 토니 블레어는 뻔뻔스럽게 보리스 존슨을 두고 영국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제법 자체를 비판적으로 철저히 검토해 봐야 한다. 국제법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나 거짓말도 아니다.

국제법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도록 돕는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활동할 틀을 제공하는 데서 점점 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조직된 폭력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1651년 걸작 《리바이어던》에서 지적한 기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국내법의 배후에는 법을 만드는 국가의 조직된 폭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국가를 강제할 힘을 가진 국제 정부는 없다. 그래서 한 국가가 국제법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는 그 국가의 이해관계와 힘에 달려 있다.

20여 년 전에 논평가들은 미국을 "불량 초강대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면 국제법을 기꺼이 무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전쟁범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에 참석해 자국의 군인과 스파이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언제나 거부했다. 미국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존슨의 문제는 영국은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자신이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대단히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거둔 가장 큰 성공이 주요 무역 강국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단일 시장(세계 최대 규모다)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 시장에 접근하려고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아들였다.

영국이 이런 규범을 계속 따를 것이냐가 영국과 유럽연합 간 분쟁의 진정한 핵심이다.

질서자유주의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가 유럽연합의 탄생과 발전에 끼친 영향 또한 중요하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규칙을 통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유럽연합이 국가들의 카르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바람직한 규칙 제공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국민국가들은 국민들의 소망 탓에 더 제약받는다고 본다.

이는 유럽연합이 유로존 위기에 경직되게 대처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자신의 규칙이나 국제법을 언제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 갇힌 난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곤경을 보면 유럽연합이 두 가지를 모두 어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끔찍하기 짝이 없는 존슨 정부에 맞서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그 투쟁을 벌일 좋은 무대가 못 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2호 / 번역 김동욱

배경 설명

내부시장법안 논란

지난해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남북으로 가르는 대신 영국 안에서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관세 장벽을 치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번복하겠다고 나서자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정진희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계급 환원론을 넘어서')과 이를 비판한 필자의 글('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 330호)에 대한 반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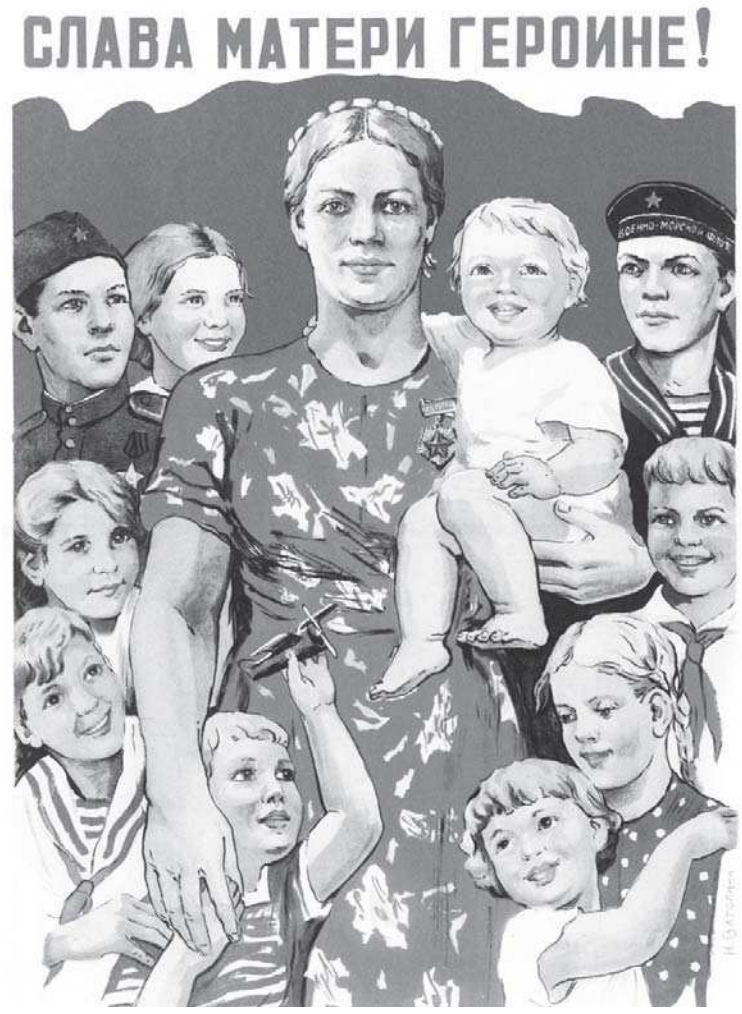
마르크스주의를 계급 환원론으로 치부한 지수의 주요 논거 하나는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이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 사회는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스탈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농업의 강제 집산화와 억압적 공업화를 시작한 1928년 이후 소련은 더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로 바뀌었다. 필자는 위에 언급된 글에서 이 점을 설명했다. 소련 국가자본주의가 서구 시장 자본주의와 경쟁하면서 노동계급(그리고 인민 일반)의 필요가 자본 축적에 종속된 결과, 노동계급 착취와 여성 차별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 천연옥은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환원론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반대 근거를 댔다. 옛 소련 자체와 동독 · 중국 · 북한 · 쿠바를 사회주의로 보며 이들 나라의 사회에서 성평등이 거의 실현됐다는 것이다. 그는 "20세기 사회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를 구별한 뒤, 후자를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이름으로 자본주의화된 구 소비에트 국가들"로 지칭한다. 그리고 "20세기 사회주의"에서는 여성해방을 위한 여러 조처들이 시행됐음을 길게 서술하며 그 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우월했음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화"됐다는 것인지 천연옥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체제라면서도,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한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옛 소련 붕괴 전에도** 소련 자체와 동유럽 · 쿠바 · 중국 · 북한 등지의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해방이나 평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서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스탈린은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 수여된 훈장(왼쪽). 자식을 10명 이상 낳은 어머니를 영웅으로 칭송한 1944년 소련의 공식 포스터(오른쪽)

소련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착취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거대한 전진이었다. 혁명 직후 여성해방을 위한 조처들이 대거 시행됐다. 그러나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공과 러시아 국내 반혁명 세력들의 반격으로 일어난 내전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혁명을 경험한 노동계급 상당수가 포함) 경제가 붕괴하면서, 여성해방을 위한 자원이 극도로 빈약해져 그 시도는 더 전진할 수 없었다.

러시아 혁명이 쇠퇴하는 가운데 부상한 관료층의 우두머리 스탈린은 1927년경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1928~1929년에 억압적 공업화와 강제적 집단농장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베테랑 볼셰비키를 모두 살해하고 트로츠키를 국외 추방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 축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에 뛰어들면서 소련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한다.

생산이 무기 경쟁과 자본 축적에 종속되면서 대중의 필요, 특히 여성의 필요가 무시됐다.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관건이 되는 경제 부문, 가령 주택 공급, 소비재, 서비스 부문이 가장 뒷전으로 밀려났다. 스탈린이 추진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기 직전인 1927년 전체 공업투자 가운데 소비재는 55.7퍼센트인 반면, 생산수단은 32.8퍼센트였다. 이 비중은 그 뒤 완전히 역전됐다. 1932년 생산수단이 55.3퍼센트를 차지했고, 이 비중은 1950년 68.8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했다.

1928년 이후 제노텔(혁명 뒤 여성해방을 촉진하고자 볼셰비키 정부 내에 만든 여성부)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국가의 경제 목표에 완전히 종속돼 1930년 세계여성의 날에 "100퍼센트 집산화!"라는 구호를 제시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제노텔은 곧 해산 당했는데, 여성해방을 상징하는 기구여서 스탈린의 경제 정책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천연옥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깨닫게 되었고 일, 교육, 사회적 활동 등에 완벽하게 편입되었기 때문"에 제노텔이 해체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옛 소련 당국의 홍보와 선전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다.

193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 노동자 수가 급증했는데, 1940년경이 되면 여성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량 고용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착취가 강화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 규정이 없어지거나 무력화됐던 것이다(야간노동과 지하 작업 금지 폐기 등). 스탈린 관료는 동일임금을 공격하며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고, 노동강도를 엄청나게 강화시켰다.

제1차 5개년계획(1928~1933년)이 시행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은 강제적으로 하락했다. 1928~1932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9퍼센트나 하락했다. 소득 감소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 밖의 노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 관료는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가족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도 할 것을 요구했다. 1930년대 들어 성적 자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났고, 여성에게 출산이 장려되고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강조됐다.

러시아 혁명 직후 세계 최초로 낙태가 합법화됐지만, 1936년에는 불법화됐다. 여성의 요구만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게 된 1920년의 낙태법과 달리, 1936년의 법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만 의사의 허락을 받아 낙태를 하게 했다.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사람은 최소 2년형을 받을 수 있었고, 낙태한 여성은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낙태 불법화는 1955년까지 유지됐다.

천연옥은 낙태 불법화가 "스탈린이 아니라 소비에트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고 남성들의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마치 여성을 위한 것인 양 변호한다. 그러나 스탈린이 철권통치 하던 시대에 이뤄진 낙태 불법화가 스탈린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회 구조에 대한 무지를 반영할 뿐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 낙태를 금지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낙태를 금지해도 적잖은 여성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끝내고자 낙태를 선택하는 법이다. 그럴 때 낙태 금지는 제대로 된 시술과 처방을 받지 못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실제로 소련에서 낙태 불법화 뒤에도 낙태를 하려는 여성이 여전히 많았는데, 1939년에는 낙태 합법화 시기보다 더 많아졌다. 1936년 이후 이뤄진 낙태의 90퍼센트가 병원 밖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여성들은 불법 낙태 시술로 감염, 복막염, 천공, 출혈 등 온갖 합병증에 시달렸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낙태 불법화는 스탈린 체제가 전통적 가족제도를 복원하려고 벌인 더 폭넓은 공격의 일부였다. 1936년 가족법은 '어머니의 의무'를 매우 강조했고 가족의 강화와 안정을 요구했다. 결혼 등록을 의무화했고, 이혼 절차를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해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성애 처벌도 부활했고, 혼외관계를 처벌하면서 사생아와 간통이라는 개념도 부활했다.

1944년부터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에게 '조국 영광 메달'을 주기 시작했다. 6명을 낳으면 1등급, 7명을 낳으면 2등급, 10명 이상을 낳으면 '어머니 영웅' 지위를 부여했다. 국가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관념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1943년~1954년 청소년들의 남녀공학마저 다 사라졌다.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소련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여성 고용이 크게 늘어나 1980년대에 소련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산업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의 85퍼센트 이상이 전일제 노동자나 학생이었으며, 여성은 전체 노동인구의 51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소련 공산당은 여성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여성 전일제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5~70퍼센트에 불과했다. 서구처럼 여성들이 임금이 낮은 직종에 집중되거나 낮은 등급의 일자리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천연옥은 옛 소련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련에서 임금격차는 차별의 증거가 아니라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낮은 임금을 주는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이 덜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여성 노동자 차별을 사실상 합리화하는 주장이다. 옛 소련의 여성들이 주로 '정신노동'에 종사한 것은 전혀 아니다. 여성은 대개 임금이 낮은 산업부문에 고용됐는데, 대부분 정신노동과 거리가 먼 업종에서 일했다. 여성은 직물 노동자의 85퍼센트, 조리 노동자의 90퍼센트, 봉제 노동자의 9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간호원과 보모의 98퍼센트, 타자수와 비서직의 97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이런 성별 분업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동일하다.

소련 여성의 낮은 임금은 여성들이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고용상의 차별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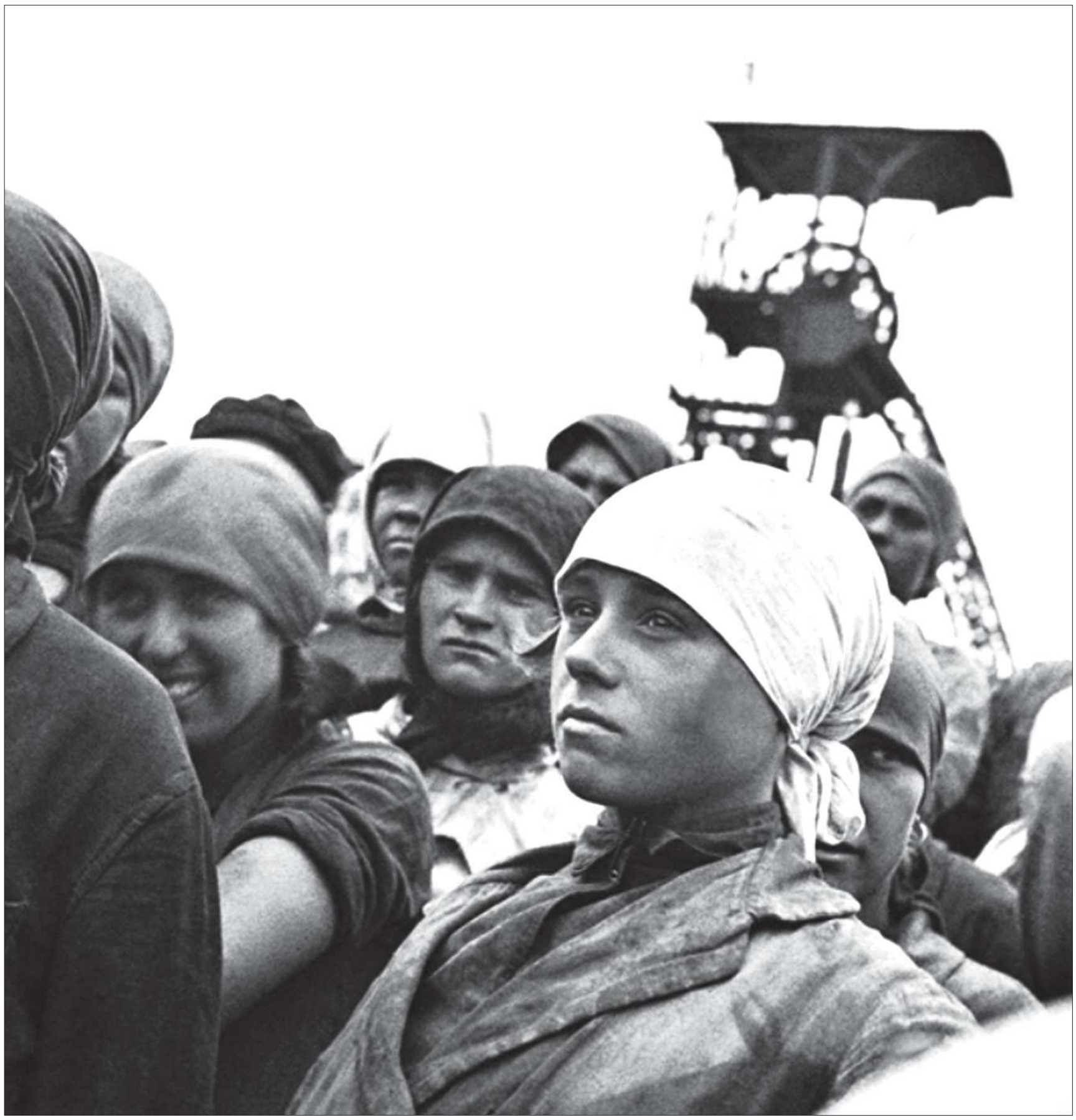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옛 관념의 유산이 아니라 지배계급(소련 관료)이 노동계급 착취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일부였다. 스탈린 집권기에 노동자들은 여성과 남성 가릴 것 없이 생산성 향상 압박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극도로 착취 · 억압당했다. 무기 부문을 증강하며 축적 압력이 계속되고, 부가국가 관료의 통제 하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첫 5개년계획 기간에 실질임금은 절반이나 줄어들었고, 나중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조차 여전히 매우 낮았다. 1950년 전체 실질임금 수준은 1928년 수준의 60~80퍼센트에 그쳤고, 1950년대 중엽이 돼서야 1928년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는 저항의 소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 살인, 고문, 투옥, 강제노동수용소 등 가혹한 탄압을 했다. 노동규율을 강제하고자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1980년대 초에도 경찰은 일을 빼먹고 영화를 보러 온 사람이 있는지 영화관에서 확인했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직하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공식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는 등 국가의 도구(어용) 노릇을 했다. 소비에트 여성위원회 같은 기구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조직들이 마치 여성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옛 소련의 여성 노동자들은 서구의 여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서 양육 · 가사의 부담을 주로 짊어졌다. 많은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미취학 연령 아동의 고작 절반가량만이 1년짜리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성들이 주당 41시간을 일했기에 보육시설 부족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다.

반면, 상층 계급 가정의 삶은 판이했다. "당과 군대의 엘리트, 인텔리 예술가와 과학자는 보통 가정부와 요리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동계급과 농민이 겪은 고질적인 소비재 부족도 겪지 않았다. 특권층 가족들은 특별 상점을 통해 물품을 충분히 공급받았다.

그러나 노동 대중은 생필품을 공급받기 위해 매일 수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고, 이 일은 주로 여성들이 맡았다. 대다수 여성들은 극심한 주택난, 만성적인 생필품 공급 부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허덕였다.



1930년 소련의 광산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 1930년대에 여성의 야간노동과 지하작업 금지 조항이 폐지되면서 어린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탄광에서 장시간 일했다

동독

천연옥은 통일 전의 서독과 달리 동독은 성평등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들, 사회적 돌봄 인프라 수준, 높은 여성 고용률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동독의 여성 고용률과 보육시설 공급이 서독보다 높았다고 해서 동독 여성들이 해방된 삶을 누린 것은 전혀 아니다. 노동력 부족 때문에 국가가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를 높이는 데 적극적이었고 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늘렸지만, 동독에서도 여성들은 직장에서 노동하는 한편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았다.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낙태는 옛 동독에서도 수십 년 간 금지됐다. 동독 건국 이듬해인 1950년 9월 낙태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낙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심각한 유전적 조건에 있는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허용됐고, 불법 낙태는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1950~1955년 매년 7만~10만 건의 불법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았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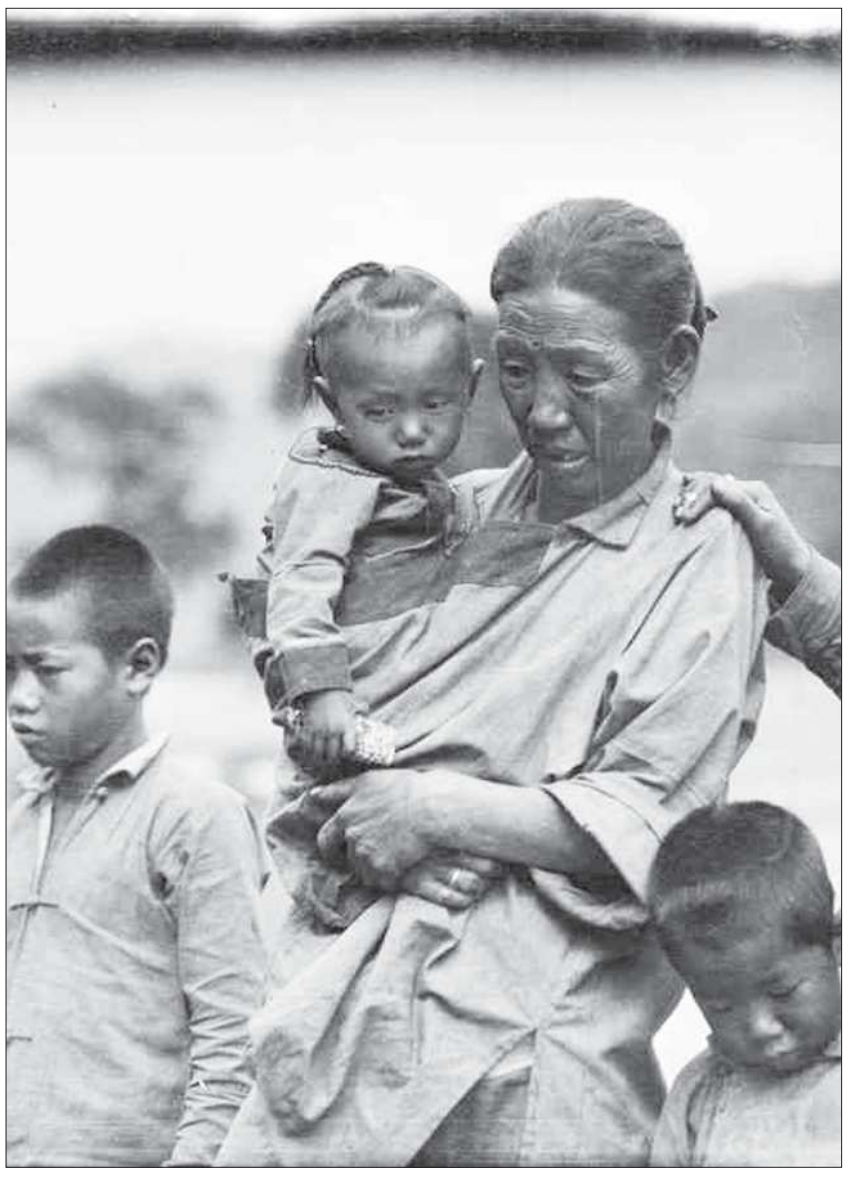
옛 동독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옛 서독에 비해 훨씬 높았지만, 서구의 자본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됐고 여성 임금은 남성보다 낮았다. 동독 여성 임금은 1989년 남성 임금의 약 70~80퍼센트에 그쳤다. 이것은 당시 서독보다는 높은 수치였지만, 동독의 법률에 적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임금이 남성보다 낮아서 여성들은 연금도 남성보다 적게 받았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높았지만 승진에서도 여성이 뒤처졌다. 고위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었다.

동독 등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에 세워진 국가들('인민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노동자 혁명의 결과가 아니었다. 1945년 독일이 연합국에 패배한 뒤 강대국들 간 분할의 산물로 소련 군대가 동유럽으로 진군했고,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은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그 뒤 동유럽 각국에서 소련 사회를 본따 '계획 성장'이 도입됐는데, 중공업 건설에 총력을 다하면서 소비재 부문의 성장은 방기됐다. 그 결과, 1948~1953년 동유럽 전반에서 생활수준이 하락했다.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동유럽에서도 노동계급은 국가와 생산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들의 축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국민생산 중 축적의 비율은 공식 통계로 25퍼센트 이상이었고, 공식 가격 메커니즘의 왜곡을 고려해 다시 계산한 수치로는 약 40퍼센트에 이르렀다. 대중의 소비는 극도로 억제됐고, 양육과 가사를 주로 책임진 여성 대중의 부담은 더욱 컸다.

동유럽 국가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국가 관료의 특권과 부패, 만성적 소비재 부족, 정치적 민주주의 부재 등에 대한 대중의 오랜 불만은 결국 1989년 민주주의 혁명으로 분출해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들이 잇달아 붕괴했다. 그 여파로 1990년 옛 동독도 붕괴해 옛 서독으로 흡수 통일됐다. 옛 동독 사회를 오늘날 다시금 여성이 성취할 본보기처럼 제시하는 것은 실로 몽매한 주장이다.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운동 당시 농민 여성
대약진운동 실패로 대기근이 일어나 3년간 2천 7백만~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중국

1949년 신중국(이하 중국)은 동유럽의 체제와 달리 혁명을 통해 세워졌다. 그 혁명은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국민국가를 세운 진보적인 사회혁명이었다. 하지만 노동자 국가를 세운 노동자 혁명은 아니었다. 물론 혁명 뒤 몇 년 간 여성에게 이로운 개혁들이 시행됐다. 처음으로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혼의 권리와 토지 소유권, 더는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권리도 보장받았다. 조혼과 정략결혼을 금지하는 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중국 국가 관료들의 미사여구와 달리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1949년 혁명은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농민의 지지를 받은 민족해방 혁명이었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노동자 · 농민의 요구와 필요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강력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에 늘 종속됐고 여성 차별은 중국에서 새롭게 구조화됐다.

1955년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를 추진하면서 여성이 대거 생산 활동에 참가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 여성의 95퍼센트가 인민공사에 소속돼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등의 일을 했다. 집단농장에서 일을 해 '노동점수'를 얻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 직후 일터로 돌아와야 했다. 이것은 장기간 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 농촌 대부분에서는 집단 보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껏해야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기도 했다.

도시에서는 보육시설 등의 제공이 농촌보다 나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고 여전히 양육을 하면서 일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졌다. 양육과 가사를 주로 여성이 맡는 현실은 여성 노동자 차별로 이어졌다. 한 연구자는 1981년 중국 현지 조사 당시 공장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가사노동 등 여러 의무 때문에 우수한 노동자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에나 있을 뿐이었다. 베이징과 샤오싱에 있는 남녀 236명(정부 관리들이 선택한 표본)의 수입지수를 보면 여성은 남성 평균의 71.7퍼센트만 받았다. 이 수치는 당시 미국(58.6퍼센트), 영국(66퍼센트), 캐나다(65퍼센트)보다 높았지만 스웨덴(88.7퍼센트)보다는 낮았다.

도시에서 중공업 숙련직 일자리는 대부분 남성에게 배정됐고, 여성들은 흔히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고용됐다. 여성들이 더 취약한 조건에 있었기에 1990년대에 많은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여성이 도시 노동자의 3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해고된 노동자의 약 69퍼센트가 여성이었다.

'개혁개방'을 단행한 1979년부터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은 매우 억압적이었다. 많은 인구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긴 국가는 한 자녀 정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 일자리를 박탈했다. 여성에게는 낙태와 불임 수술이 강요됐다. 이후 출산율 감소로 청년 인구가 크게 부족해지자 2016년 중국 국가는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포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한 가구당 두 자녀 출산만 허용하며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고 있다.

쿠바 빈민촌 여성들 1980년대 말 쿠바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빈곤층이 크게 늘었다

쿠바

부패한 친미 독재 바티스타 정부를 무너뜨린 사회 혁명(1959년)으로 진정한 개혁이 실시됐다. 쿠바의 보건과 교육제도의 가치는 쿠바 망명자조차 인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쿠바 혁명도 중국 혁명처럼 노동계급이 아니라 중간계급 지식인이 이끈 민족 해방 혁명이었고, 혁명 뒤 국가자본주의 건설로 나아갔다. 혁명 뒤 3년 이내에 경제의 주요 부문을 국유화했지만, 노동자 통제는 조금도 없었다.

천연옥은 성별 임금 차이가 없고 낙태가 합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쿠바가 "무척 성평등한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현실과 크게 다르다.

쿠바 여성들은 결코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않았다. 1980년대 중엽에 평균 급여액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 남성은 62.6퍼센트였지만 여성은 38.6퍼센트에 그쳤다. 1990년대에는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빈민 중 여성들이 더 많았다.

혁명 뒤 쿠바 정부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직업에 대한 여성 참여를 제한했다.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며 쿠바 노동부는 1976년 300개 직업에 여성의 참여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실제 목적은 일시 해고되거나 실업자인 남성 노동자를 여성 실업자보다 우선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중엽에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 공식 여성 단체인 쿠바여성연맹(FMC)의 반대 때문에 여성에게 금지된 직업 항목을 5개로 축소했다.

쿠바 여성들은 여전히 양육과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천연옥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남성의 의식 문제로 돌릴 뿐 쿠바 사회의 구조가 여성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한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쿠바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지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여성으로, 최저 수준의 임금(평균 임금의 77퍼센트)을 받았고, 보육시설 공급은 일하는 어머니 수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1962년 쿠바의 무상 공공 보육시설은 여성 10명 당 한 자리만 제공했다. 신규 보육시설 건설이 늘 여성 고용 증가에 뒤처졌기에 이 비율은 1990년대까지 유지됐다.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대다수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집에서 양육과 가사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렸다. 사실, 여성들은 많은 경우 무보수의 '자원 노동'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기에 삼중 부담에 시달렸다.

1970년대에 쿠바 대중은 생산 증대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일해야 했는데, 보육시설은 그때 문을 열었지만 학교는 문을 열지 않았다. 공식 여성 단체인 FMC가 토요 노동에서 여성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카스트로는 나라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10대 소녀나 숙모, 할머니 같은 대가족 성원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고, 사적인 보육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졌다.

여성의 이중 부담이 매우 커서 이직률이 높았다. 1969~1974년에 노동자가 된 여성 70만 명 중 50만 명이 일을 그만뒀다. 법은 고용상 여성 차별을 금지했지만, 경영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믿을 만한 노동자라며 임금, 승진 등에서 계속 여성을 차별했다.

주택 부족도 심각했다. 주택난이 하도 심해서 1953년~1995년 사이에 손자와 조부모가 같이 사는 가정이 갑절로 늘었을 정도이다. 청년들은 결혼을 해도 새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거나, 이혼한 커플이 흔히 따로 살 수도 없었다. 복닥거리는 집에서 젊은이부터 노부모까지 함께 살다 보니, 가족 성원들의 긴장과 갈등이 증대해 여러 문제(높은 이혼율, 가정 폭력 등)를 낳았다. 식량 부족에다 가전제품도 부족하고 질이 열악했는데, 이것은 특히 여성들의 부담을 높였다. 1980년대 말 긴축 조처들이 도입되면서 노동계급 여성들의 조건은 더욱 악화됐다.

낙태 문제에서도 쿠바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1938년 쿠바의 낙태법은 임산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낙태(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선천적 장애를 피하려는 경우)만 허용했다. 1959년 혁명 승리 뒤 몇 년 간 카스트로 정부는 오히려 이전의 낙태 금지법을 엄격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여성의 자가 낙태나 뒷골목 낙태가 증가해 사망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1965년, 방침을 바꿔 의사들이 다시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그때도 여성은 여전히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낙태 처벌은 1979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그 뒤 임신 10주까지 의사의 승인 하에 낙태가 허용됐다. 2 · 3기 낙태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낙태 허용 범위가 혁명 직후보다 상당히 늘었지만 쿠바 국가는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1979년 임신의 약 40퍼센트가 낙태로 끝나자 카스트로는 여성들이 낙태를 피임의 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처벌을 위협했다. 1980년대 말 쿠바의 대중매체는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도덕적 압박을 받았다.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성의 절반이 낙태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을 발견했다.

쿠바에서 낙태가 여성들에게 피임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출산을 조절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이용된 데는 이유가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성교육에 대한 저항이 큰 구실을 한다. 고질적인 피임 도구 부족도 작용한다.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를 자처하며 평등 이데올로기를 이용했지만 지배 관료는 노동계급의 노동을 착취했고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계속 여성들에게 전가했다. 다른 스탈린주의 국가 하에서처럼 노동자나 여성의 독립적 조직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노동자 남한 등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터와 가정 일의 이중 부담에 시달렸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서 여성에게 이로운 개혁들이 실시됐다.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다. 강제 결혼 금지, 이혼 허용, 여성의 상속권 보장 등 여러 개혁입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성 차별은 북한의 사회 구조 속에 다시 뿌리를 내렸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북한 국가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해 나갔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특히 중공업에 쏟아부었다. 1953년부터 시작된 3개년계획 기간에 중공업과 경공업의 투자 비율은 무려 81.8 대 18.2였다. 이런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196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북한에서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하영이 쓴《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를 참조하시오.)

북한 관료가 강박적으로 생산수단 축적에 나서고 국방비에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면서 인민의 소비는 희생됐다.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가혹한 희생을 치렀다. 고속 성장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거나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중공업 우선 노선 때문에 소비재 부족이 심각해졌고, 이것은 인민 전체에 고통을 주었고 특히 여성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여성들에게 양육과 집안 살림을 돌보는 책임이 주로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산업화에 나서면서 이혼 규제 등 통제를 강화했다. 1956년 협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상 이혼만 허용하기로 했다.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이혼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에는 벌금까지 물렸다.

북한 당국은 여성이 노동자가 되도록 독려했다. 이를 위해 탁아소 등을 상당히 지었지만, 여전히 양육과 가사는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남았다. 북한 정권은 '혁명 투사를 길러 낼 어머니의 책임감'이 여성의 최고 미덕이라며 여성에게 가정의 의무를 강조한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생산성 증대 압박을 가했는데, 정부 공식 여성 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100퍼센트 출근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이 노동을 이유로 양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렇게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직장에서 여성 차별로 이어졌다. 여성은 남성보다 보수가 적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직종에서 일했다. 1980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84퍼센트에 그쳤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와 홍수로 대기근이 일어나며 북한 대중과 여성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북한 당국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북한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탈린주의 체제 하의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옛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 등 스탈린주의 체제 하의 사회를 착취와 차별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봤던 좌파들은 그 사회의 실상이 드러나자 큰 환멸에 빠졌다. 1970년대 서구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부상한 것도 스탈린주의 체제 하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를 보며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무계급 사회로 여기다 보니, 그 사회의 여성 차별을 계급 사회와 무관한 남성의 본성이나 심리에서 찾는 급진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이론을 수용하게 됐고 결국 개혁주의로 나아갔다.

천연옥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그의 주장으로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차고 넘친다. 그 사회에서 성평등이 거의 실현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해 오해를 심어 주거나 반감을 사기 쉽다. 옛 소련과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체제가 198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위기를 겪으며 붕괴한 상황에서 그 체제를 미화하는 것은 더더욱 터무니없다.

많은 좌파들이 잘못 가정하는 것과 달리, 국유화가 사회주의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193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에서도 폭넓은 국유화가 단행됐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후발 공업국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압력 속에서 가용 자원을 집중하며 강력한 경제를 건설할 유일한 방법으로 국유화를 흔히 감행했다.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계급은 국가를 통제하기는커녕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수용소, 경찰의 일상적 감시, 여성 · 성소수자 · 민족 차별 등 갖가지 차별과 박해가 존재했다. 국가 관료가 생산수단과 축적 과정을 지배하며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과 군사적 경쟁을 벌이면서 노동계급을 착취했고 대중의 소비는 축적에 종속됐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해방이나 평등이 실현될 리는 만무했다.

오늘날 불황이 길어지고 깊어지며 각국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의 조건을 공격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여성들이 진 부담도 증가하며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갖고 여성해방 투쟁을 벌이려면,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도입될 수 없고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혁명과 권력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 등 국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여성들의 실제 조건은 그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와 본질상 동일한 착취 · 차별 체제에 의해 돌아갔음을 보여 준다.

스탈린의 소련 사회 변혁은 반혁명이었다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내 곁에는,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네. 빌어먹을."

그러나 그로부터 24년 후, 스탈린은 재판을 조작해 카메네프를 "파시스트 첩자"로 몰아 "개처럼" 쏴 죽였다.

1912년의 스탈린은 대담한 혁명가이자 붙임성 있는 동지로 정평이 나 있었다. 1930년대의 스탈린은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세계 곳곳에서 혁명의 불씨를 짓밟는 데 일조한 독재자였다.

스탈린의 범죄 행위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을 폄훼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는 혁명이 패배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오시프 주가쉬빌리(스탈린의 본명)는 1878년에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스탈린은 가난에서 벗어나려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 교육을 받았지만, 무신론과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게 됐다.

스탈린은 불법 혁명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투옥되고 국내 유형지로 추방되기를 거듭했다.

그는 혁명을 위해 은행을 털기도 했다. 1907년 6월 티플리스[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옛 이름]에서 스탈린은 국영은행으로 수송 중이던 거액의 현금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1917년 초 러시아 혁명 시작 당시 스탈린은 믿음직한 볼셰비키 상근자였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 일원이자 볼셰비키 중앙위원이었던 스탈린은, 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입장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곤 했다.

혁명가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스탈린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혁명이 한창이었던] 1917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스탈린이 대중 연설을 한 것은 세 번밖에 안 됐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병으로 죽어가던 1922년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서기장이 된 스탈린 동지 수중에 무제한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그가 이 권한을 언제나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고집

레닌이 죽고 나자 스탈린은 레닌의 후광을 업으려 했다. 그래서 레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 것을 고집했고, 레닌 신격화에 앞장섰다.

당시 러시아 혁명은 고립됐다. 혁명을 일으켰던 노동계급은 전쟁과 기근 때문에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혁명 전에는] 3백만 명이었던 성인 노동자 중 1921년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1백20만 명에 불과했고 그 마저도 상당수는 식량을 찾아 도시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레온 트로츠키는 여러 볼셰비키 분파들이 혁명에 가해지는 각기 다른 압력을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했고, 또 일부는 사적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스탈린은 성장하던 관료 집단을 대표했다.

트로츠키의 분석은 탁월했지만, 관료 집단이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봤던 것은 오류였다.

혁명은 확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쇠락했다. 그러면서 반혁명이 득세했고 스탈린은 그 화신이었다.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세계 혁명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제 러시아의 과업은 산업화라고 주장했다.

1931년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진국보다 50년에서 1백 년 뒤처져 있다. 우리는 10년 안에 그들을 따라잡아야 한다."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산업화는 백 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수백만 노동자의 삶을 파탄냈다. 잔혹하게도 스탈린은 이 과정을 소련에서 단 20년 만에 밀어붙였다.

혁명의 성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됐다.

스탈린은 1917년에 민중이 쟁취한 이상을 파괴했고, 1917년의 투사 다수를 물리적으로 숙청했다. 그들이 혁명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러시아는 어떤 점에서도 사회주의 사회라 볼 수 없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발행한《노동자들을 위한 1917 러시아혁명사》의 한 장을 발췌한 것이다.

한 달 반 남은 미국 대선

서로 물어뜯는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

김준효

사진 출처 Gage Skidmore

미국 지배층 주류의 불신을 산 트럼프. 그러나 바이든이라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지금 이전투구가 한창이다.

9월 1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지명 후 최초로 네바다주(州)에서 실내 유세를 열었다. 자기 정부의 권고에 따른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무대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둥 뻔뻔한 말을 쏟아냈다.

이날도 트럼프는 주되게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국내 테러 세력"이라고 비난했고, "거리로 나가 저들에게 '우리 시청 불태우지 마라!' 하고 외치라"고 자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범죄시하는 선거 전략은 해묵은 것이다. 1968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은 흑인 해방 운동과 반전운동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알량한 인종차별 완화 조처를 "역차별"로 모는 전략으로 득을 봤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대선이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권력자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구도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선거운동 전략의 재판이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를 자처해, 경제 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부자 지키기에 실망한 백인 하층민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런 전략으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져야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재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 트럼프가 '큐어넌(QAnon)'* 같은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도 같은 속내에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아웃사이더' 자처의 효과는 이전만 못하다.

미국 지배층 주류는 선거로 트럼프를 교체하려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에게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대기업 · 부유층 후원금 위주인 두 후보의 선거운동비 차가 8월 한 달에만 1억 5000만 달러 이상 벌어질 정도다.

이들은 팬데믹 위기와 경제 위기가 중첩된 심각한 위기에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4년 더 있는 게 못내 불안하다. 이들의 눈에 비친 트럼프는 지배 질서를 교란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수호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 없는 자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지배층 주류가 보기에, 트럼프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이 주의 깊게 구축한 세계 질서를 교란하는 자다.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적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특히 서유럽)을 우방으로 두고 세계를 '경영'한다("팍스 아메리카나")는 전략 말이다. 특히 나토로 대표되는 서유럽 열강과의 관계 문제가 임기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됐다.(반면 트럼프가 군비를 증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했다.)

팬데믹 위기와 경제 위기가 중첩된 심각한 위기 상황에 트럼프가 재선할까 못내 불안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가 당선했던 것도 지배층 주류의 전략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나 첫 국무장관을 지낸 액손모빌 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등은 미국 지배층 주류의 전략을 고수하려 했다. 이들은 트럼프에게 "미국의 [군사적 · 경제적 · 외교적] 해외 투자의 이점을 이해시키려 했다. 매티스는 왜 미군이 이토록 많은 지역에 파병돼 있는지를 무역협정, 복잡한 동맹 네트워크와 연관해 대통령에게 설명하려 했다. … [그러나 트럼프는] '뭐든 돈이 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필립 러커 · 캐롤 르닉 공저, 《매우 안정적인 천재》)

그러나 트럼프가 제 뜻을 펼치면서 전략적 이견은 더한층 두드러졌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제국주의 질서를 짊어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의 일국적 이해관계를 챙기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시각에서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동맹 체계였던 나토를 폄훼하고 이란 핵협정을 일방 파기했다. 이에 미국 지배층 주류와 정보기관들이 앞장서서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를 공격했다.

바이든이 전통적 전략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배경이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기도 전부터 "우방과의 혈맹을 복원"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엄중히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망친" 지난 4년을 되돌리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지배자들이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런 점과 연결해 봐야 한다. 기업주들과 권력층은 트럼프가 경제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묵인하고 때로 협조하지만(이들에게 평범한 미국인들의 목숨은 기껏해야 부차적이다), 전 세계적 위기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로 여긴다. 하지만 지배층 주류에게라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전투구가 끝을 모르고 난무하는 까닭이다.

내우외환

트럼프는 국내 통치 문제에서도 논란에 직면했다. 물론 지배층은 트럼프가 인종차별 · 성차별을 노골적으로 휘둘러서 반발한 것이 아니었다. 인종차별과 잔혹함은 비단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아로새겨진 것이다. 흑인 노예의 피를 먹고 자란 미국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국내에서 KKK 같은 인종차별적 극우 테러도 때로 용인했고, 세계 곳곳에서 친미 독재자들의 대량 학살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임기 내내 트럼프는 전통적 지배 전략과 통치 수단(공권력)을 활용하는 한편, (자신의 선거운동 구호를 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 등 강경 우익을 고무해 사회적 불만을 흡수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전략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을 강타하고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을 문제 삼으면서 문제가 됐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가라앉히는 데에 완전히 실패했다. 트럼프의 대응은 운동의 반발만 키웠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군대로 운동을 진압하려 했다가는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지배층 거의 전부, 특히 중요하게도 군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게다가 트럼프가 운동에 맞서 극우의 행동을 부추긴 것 때문에 곳곳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극우가 거리에서 전투를 벌인 것도 지배자들이 바란 '질서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가 미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구호인 '법질서 옹호'를 내거는데도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불신에 차 "미국인 과반수가 법질서 수호에서도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선호한다"며 딴죽을 거는 까닭이다.

이 점에서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니라 자신이 체제를 안정시킬 대안이라고 자리매김하려 한다. 바이든이 막대한 돈을 들여 법질서 옹호를 내세우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폭력성'을 비난한 광고를 한 것은 이 때문이다.(이 광고는 트럼프가 포틀랜드에서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극우 시위자를 살해한 반(反)파시즘 운동 지지자를 보복 살해한 직후에 나왔다.)

이는 대중의 변화 염원이 아니라 지배층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이토록 큰데도 바이든의 당선을 장담키 어려운 이유다. 바이든 지지율은 몇 달째 정체 상태이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약을 지지해서 바이든에 투표한다'는 유권자는 한 자리수대 비율이다.

그런데도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을 친서민 후보라고 포장하고, 친서민 공약을 더 부각해 홍보하라고 바이든에 조언하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샌더스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트럼프에 맞선 대중의 승리라고 주장하지만, 바이든이 당선한다 해도 신임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 서민을 공격하고 인종차별을 이용할 것이다.(그러나 그 전략으로도 미국 자본주의 · 제국주의가 맞은 위기와 딜레마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했던 배경에도 바이든이 대표하는 전통적 전략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지배자들의 이전투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다. 그간 이 운동은 기성 정치 질서를 뒤흔들었고 불가능하다 여겨지던 여러 개혁을 쟁취했다. 9월 11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범들을 재판대에 세우기도 했다. 이전에 유색인종을 살해한 경찰은 재판조차 받지 않기가 부지기수였는데 말이다. 이렇게 미국 대중은 오직 스스로의 행동으로**만** 변화가 가능함을 지금도 보여 주고 있다.

용어설명

큐어넌(QAnon)

인터넷 게시판 '4chan'에서 Q라는 익명의 인물이 펼친 음모론을 지지하는 흐름. 클린턴, 오바마 같은 민주당 권력층이나 영화배우 톰 행크스 같은 유명 인사들이 소아성애와 식인을 일삼는 음모적 집단의 일부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박설

사진 조승진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 정부가 쏟아부은 수백조 자금은 일자리 보호에 쓰이지 않았다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8월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할 경우 일자리 67만 8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퍼센트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애초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가령,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고용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뒷받침한 한국노동연구원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 이후 "두 달 만에 (일자리의) 50퍼센트가 회복"됐다며 "기존 위기 때와 비교해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했다.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발생한 충격"이기에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고보다는 일시휴직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줄어든 점, 1997년 경제 공황 때와 달리 상용직이 아니라 임시 · 일용직이 집중 타격을 입은 점 등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우선, 정부가 내세운 성과는 단기적으로 약간 완화된 지표를 과대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예컨대, 5월 이후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는 노인 공공근로의 재개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는 수십만 명이 저질의 단기 일자리로 복귀한 것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청 발표를 보면, 5월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던 일시휴직자 수는 8월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조사한 결과인데도 그랬다. 취업자 수는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정해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월보다 60만 명이나 감소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첫 6개월 동안 사라진 일자리보다 무려 2.4배 많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무직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도 1790만 명이나 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쉬거나 단념한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 314만 명을 기록했고,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확장실업률이 24.9퍼센트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이 반영되는 9월 고용지표는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심화해 온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지면서 구조조정 공격이 강화될 수 있다.

상용직·기간산업으로 번지는 고용 위기

실제로 심상치 않은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 임시 · 일용직, 서비스업과 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던 고용 위기가 최근 들어 상용직, 제조업과 항공산업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3~4월 두 달 동안에만 임시 · 일용직 노동자 59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정규직 ·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이 더 컸다.

전체 취업자의 45퍼센트인 1200만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노동부 추산, 자영업자 포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에 줄어든 일자리의 82퍼센트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부가 휴업급여의 일부(67~90퍼센트)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심화해 온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지면서 구조조정 공격이 강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고 지원 수준도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70만 명으로,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총 4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으로는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지만, '계약 체결', '전속성'이라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걸었다. 그렇게 또다시 특고 노동자 상당수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종합적인 통계 추이를 놓고 보면, 임시 · 일용직인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가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상용직은 6개월 연속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 온 제조업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년째 지속 하락해 왔는데, 4~5월부터 감소폭이 급격히 커지더니 7~8월에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지난해 동월 대비). 자동차 부품사, 중형조선소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여파다.

9월 7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이 실 소유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최근 매각이 불발된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 2조 400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희생(이른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요구가 따라 붙었다. 벌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순환휴직 얘기가 나오고 있다.

향후 인력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기간산업 자금 지원에 고용유지 의무를 부여했다지만, 현재 인력의 9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조건에 따라 하향 조정도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실제로 상반기에 3조 6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두산중공업은 '희망퇴직' 방식으로 1000여 명을 해고했다. 중대형 항공사 구조조정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고용 위기 수준은 산업 ·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도 · 파산을 막으려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속에서 (특히 대규모) 기업들은 그럭저럭 위기를 지연시키며 버틸 수 있고, 해고보다 인건비 절감을 통해 숙련 노동력을 유지하는 길을 선호하기도 한다. 강제 해고만이 아니라 '희망퇴직', 유 · 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 공격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쏟아부은 정부 재정,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정부가 항공산업 등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수조 원을 지원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이스타항공 사측이 정리해고를 통보한 직후 지극히 타당한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심각한 불황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가, 누가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날카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들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선진국 부채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8퍼센트로 증가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600조 원 가까운 금융 · 재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부채 증가율도 빠르게 늘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도 계급 간 차이가 뚜렷하다. 막대한 재정의 상당 부분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업이 망하는 것을 막아 주려고 돈을 직접 퍼 주거나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리를 낮추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말이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경제 위기로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 · 서민을 지원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600조 원 가량의 재정 중 많이 잡아 봐야 고작 30조 원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일단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지만, 기업에 재정과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2008년 이래로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구제금융, 저금리로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왔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기업 규모가 비대해지고 대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 정부들이 부실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구명 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 기업의 파산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해서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은 좀처럼 원활하지 않고, 부실기업을 연명시켜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3년 동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8년 이후 10~14퍼센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2018년에는 그 비중이 14.8퍼센트로, 2019년에는 17.9퍼센트로 치솟았다. 불황이 깊어지는 것은 단지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닌 것이다. 이윤율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장기화해 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 11면으로 이어짐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저자

사진 출처 대구기톨릭병원

직업이나 의식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맺는 객관적 관계에 따라 계급을 정의해야 한다

최근 전공의 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본지가 전공의를 노동계급의 일부라고 본 것에(물론 전공의 파업의 요구들은 부적절했다) 일부 독자들은 의아해했던 듯하다. '의사는 중간계급 아닌가?' '앞날이 창창한 그들이 무슨 노동계급이라는 말인가?'

직업에 따라 계급 위치가 정해진다는 오해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어떤 직업은 소득이 어떻고, 어떤 직업은 교육수준(특히 자격증)이 어떻고, 어떤 직업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하는 식이다. 이는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기회라는 측면에서 계급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에 따라 계급이 규정된다고 했다. 생산수단을 소유(또는 지배)하는가 아닌가, 착취 과정에서 하는 구실은 무엇인가(착취하는 사람인가 착취 당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가 통제 당하는가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직업을 기준으로 계급을 규정하는 (사회학적) 방식은 직업 내에 위계가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계급 경계는 직업 간에 있지 않고 직업 내에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이지만, 교사 집단 위계의 상층에는 학교 경영에 관여하고 보통의 교사들을 관리하는 구실을 하는 교장 같은 (신)중간계급이 있다.

교사라는 직업을 기준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의 계급으로 취급한다면 계급 간 차이를 흐리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유사한 종류의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동일한 경력 구조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교사들은 위계 구조의 상층에 있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 아주 좁은 길이지만 승진의 기회는 그런 효과를 자극한다.

이번 전공의 파업의 요구를 보면, 그들은 의사라는 직업 위계 구조의 말단인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기보다는(이런 요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미래에 그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선임 의사들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하지만 평교사나 전공의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계급적 위치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계급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생산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변화

직업의 구체적 특징에 기초해 계급을 나누는 방식에는 다른 문제점도 있다. 어떤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거나 그 위상이 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전혀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이라고 부르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다방면에서 관리자가 늘었고,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처럼 선진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직이 늘었다.

그러자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새로운 계급'(노동계급과는 별개인)으로 규정했다. 가령 미국의 유명한 급진 사회학자인 C 라이트 밀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영직, 사무직, 전문직 등을 한데 아울러 "화이트칼라"라고 불렀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노동계급으로 보면서 그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점은 툭하면 노동계급이 사라졌다거나, 노동계급이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다수인 사회가 됐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역동적 체제인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력을 양산하고 체제의 필요에 맞게 재편한다. 옛 직업을 파괴하고, 새 직업을 만들고, 특정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가령 교직이나 은행이나 보건 업무가 50년 전과 똑같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그 역할과 지위는 계속 변해 왔다. 아무리 전문 분야라도 자본은 그 전문성을 자본주의 생산의 특징인 모종의 합리화에 종속시킨다. 내부 경쟁 체제 도입, 인원 삭감, 학교나 병원의 시장화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의 다수는 임금, 노동조건,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결여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특징을 보인다. 점점 노동계급화해 온 것이다.

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그렇게 높은 수준이 못 된다. 수량화하기 힘든 이들의 업무조차 평가 대상이 되면서 업무 보람을 느꼈던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물론 변화가 이런 방향으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가령 대학에서 대다수 강사 · 교수의 조건이 하락하는 동안, 극소수는 대학 경영과 관리에 긴밀하게 관여하게 되면서 상층 중간계급의 일부가 돼 높은 연봉과 특혜를 누리게 됐다.

전에 교사나 다른 전문직 피고용인들이 겪었던 변화 과정을 이제 의사들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개업의가 소폭 줄어든 한편, 취업 의사(봉직의)는 늘어났다. 취업 의사 가운데 전공의는 최말단을 이루며 연봉 4000~6000만 원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임금에 주당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 미래에 그들이 어떤 직급에 오르든 현재 그들의 처지는 다른 노동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요즘은 계급이 사회의 근본적 분단선이라는 생각이 좌파 내에서도 흐릿해지고 있다. 대신 성별과 인종 같은 정체성이나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고용 형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기도 한다. 계급은 한물 간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다수의 노동계급화와 그에 따른 집단행동은 노동계급의 여전한 중요성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이 사라지기는커녕 말이다.

▶ 10면에서 이어짐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고통이 증대해 왔다.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공장 폐쇄와 금호타이어 매각 등이 잇따랐다.

지금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불황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위기 극복에 협력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뜻하는 바다. 휴직이나 임금 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거나,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개악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한 곳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한다고 기업이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강요되는 양보와 희생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한 부문 · 사업장 노동자가 희생하면 그것은 다른 부문 ·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고, 이런 연쇄 작용 속에 바닥을 향한 희생 강요가 벌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 사용하는 막대한 재정을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울 수 있다.

부도나 매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유화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만이 그만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고,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것만이 일자리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개입이 더 진보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위한 투쟁의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정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제기한다. 국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망해 가는 기업을 국유화 한다고 시장 경쟁력이 살아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자는 '현실적' 타협론을 피해야 노동자가 산다.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지금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할 능력이 있고,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현금과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진정한 쟁점은 재정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필요를 강제하려면 정부에게 책임을 제기하며 투쟁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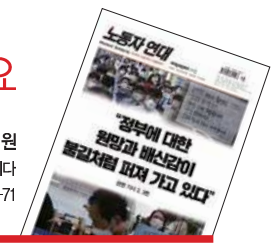
★ 5개국 사회주의 단체 공동 성명:
동지중해 전쟁 위협 반대한다!

★ **검찰 기소로 다시 불거진
윤미향 부정 의혹의 정치적 의미**

★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 ·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초등돌봄전담사들도 시간제 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 학교돌봄 법제화를 요구하며 10월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돌봄교실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열악한 방역 대책에 분노하며, 돌봄교실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국회의원 누구도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들과의 상의 한 번도 없이 돌봄 정책들을 내놓고, 심지어 학교 밖으로 돌봄교실을 떠밀어내는 법안까지 나오자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18퍼센트만이 전일제고, 82퍼센트가 시간제이다. 돌봄교실은 그야말로 돌봄노동자의 공짜 노동이 아니면 굴러가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19로 학교 문은 닫아도 돌봄교실 문을 열어야 하는 돌봄노동 필수 시대에, 돌봄전담사의 시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기는커녕 돌봄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처우 하락을 증폭시킬 지자체 이관을 담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돌봄노동자들 코로나 시대에 돌봄노동은 더욱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학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본지가 보도한 바 있듯이,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돌봄교실의 최종 책임을 교육부냐 국무총리냐로 규정하는 데서만 다를 뿐이고, 그 독소조항들은 대동소이하다. 돌봄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도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양 법안 모두 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떠넘기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돌봄교실 환경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공산이 큰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에 85.5퍼센트의 프로그램을 중단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9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명서). 결국 국가가 돌봄교실에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2021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또한 두 법안 모두 온종일돌봄을 운영할 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유 재산(학교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수익 창출에 나서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보호자의 돌봄 비용 부담도 허용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개악적 요소가 많은 법안들이다.

민간 위탁

따라서 이 법안들이 통관된다면, 돌봄교실은 학교에 남아 있지만 그 운영은 지자체가 민간 위탁으로 넘겨, 돌봄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등으로 처지가 악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80퍼센트가 시간제 고용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돌봄 공백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노동으로 채우려 할 것이다. 지금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교육 등 여러 사업이 학교에 들어와 있고, 이는 교사의 업무가 되고 있다.

결국 권칠승 의원의 법안도, 강민정 의원의 법안도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 아동이 받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리가 멀며, 정부의 책임만 약화시켜 학교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는 교사들이 돌봄업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해 왔다. 전교조 각 지부 단체협약 요구안에 이를 넣어 교육청과 교섭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 겸용교실 해소 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실행되지 않는 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지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돌봄업무 부담 현실을 결코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돌봄전담사와 교사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이들을 전일제화 · 정규직화 하고, 돌봄전담사를 늘려 돌봄의 공백을 없애야 교사에 대한 돌봄업무 부과도 사라질 것이다. 겸용교실이 아닌 제대로 된 돌봄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돌봄교실에 대한 재정 투자, 안정적 지원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이 교사들에게도 이롭다.

교사들이 돌봄교실 민간 위탁의 지름길인 지자체 이관 계획에 반대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프랑스 전역을 다시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9월 12일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대가 수천 명 규모로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를 향한 탄압은 지독했다. 경찰은 일제히 최루탄을 쐈고 파리에서 250명 이상을 체포했다.

교사인 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거리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집에만 처박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해 통치합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우리 건강보다 기업을 더 중시했어요.

"이제 마크롱은 치안에 대해 언성을 높이고 사장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파리 곳곳에서 시위대의 출입이 가로막혔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허가가 난 두 행진 대오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다.

경찰 폭력

한 대오는 별 탈이 없었지만 다른 한 대오는 경찰에게 거듭 공격당했다.

경찰은 "무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줄줄이 체포했다. 비어 있는 잭다니엘스 위스키 병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인 델핀은 혁명적 좌파 언론인 〈레볼뤼씨옹 페르마낭뜨〉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흰 가운을 입지만, 그전에 노란조끼이기도 합니다.

"공동의 적은 정부입니다."

노란조끼 운동은 2018년에 등장하여 불평등에 대한 울분이 모이는 초점이 됐다.

대규모 노란조끼 시위의 귀환은 계급적 분노가 깊어졌다는 징후다.

50세 공무원인 한 시위자는 "사회 · 경제적 도적질"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 때문에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프랑스 남동부에서 파리까지 건너와 시위에 참가한 연금 수급자인 파스칼과 파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운동은 아직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 반대하고 과거엔 히피였고 이제는 노란조끼가 됐습니다." 파리 외에도 프랑스 남서부의 도시 툴루즈에서도 수백 명이 금지령을 어기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으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리옹에서도 그랬다.

마르세유, 릴, 낭트, 니스,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등지의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모였다.

툴루즈의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노란조끼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계속 어려워졌다."

노란조끼 내에는 다양한 정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급진적인 정서를 보여 주는 징후들이 있다.

우파 "코미디언"인 장마리 비가르는 파리의 행진에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그를 향해 "성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라는 야유가 쏟아져 피자 가게로 피신했다가 도망쳐야 했다.

여러 노동조합과 학생회 연합들은 9월 17일 전국적 파업과 십여 개의 집회 일정을 잡았다.

이는 노동자들과 저항 운동이 마크롱과 사장들을 물리칠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2호 / 번역 이원웅